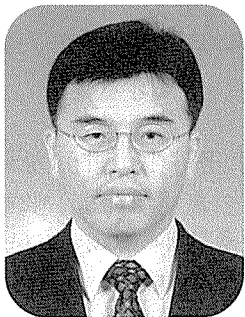


한국경제 호재와 약재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지난 1월 연두 기자 회견시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3월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하반기에 미국경기만 괜찮다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한국경제는 금년 1/4분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2/4분기 이후 점차 회복되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국내의 기관들은 거의 한결같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수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전망기관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스미스바니 등은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3%대로 낮춰 잡고 있다. 또 IMF나 모건스탠리 도이체뱅크 등은 다소 높으나 4%대로 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계 기관마저도 최근 전망을 수정해 성장률을 4%대로 낮춰서 보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는 낙관적인 쪽으로 흐르는 반면 여타 대부분 기관들은 갈수록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는 이유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양자간의 기대와 불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연히 불신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기관들은 기대보다는 불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할만한 몇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자금시장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들어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 방안에 힘입어 회사채발행이 순증가로 반전되고 기업어음도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은행대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런 속에서 당좌대출소진 한도율도 크게 낮아졌다.

한편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상승세를 보인 점도 다소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만일 앞으로 도 주가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기업의 자금난도 완화시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2월들어 크게 호전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월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작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금년 1월에는 62까지 떨어졌으나 2월에는 83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자금난해소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소비자평가지수도 올들어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아울러 다소 기술적인 얘기지만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볼 때 98년 8월에 바닥을 친 한국 경제가 작년 8월경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불과 2년정도 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또 그 정점의 높이가 이전 순환기의 정점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의 호재가 나타나면 재경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소저점을 치고 회복세로 반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대요인보다는 불신 요인이 아직은 더 우세하게 자리잡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낙관적인 시각보다 더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는 구조조정 부진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말까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년 2월말까지 공공부문과 노사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기한내에 마무리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금년 2월말까지 4대부문의 구조조정 '틀'을 완성시키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시장은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데 대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3월초 가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개혁이 여러 분야에서 크게 미진함이 새삼 확인됐다. 정부도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의 발표를 통해 자만과 개혁피로, 충선 등의 정치일정이 개혁의지를 이완시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4대 부문 개혁중 기업부문에서는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 자구노력과 연계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대표적인 문제다.

금융부문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을 봤지만 시장시스템을 통해 기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공공부문에서는 민영화와 통폐합을 통해 슬림화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충분치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등 부실경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4대부문 개혁중 가장 미진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이는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한 사항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는 차기 정부로 시행을 미뤘다.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개선돼야 할 제도도 산적해 있다.

한편 4대 개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개혁은 그 윤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4대개혁중 가장 미진한 노동분야에서는 그나마 노사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기구조차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다. 정부가 대우차 매각 실패 관련 책임자나 신용금고 불법대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한다고 해놓고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또 언젠가는 뼈까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자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더니 지금은 외국의 비판까지 받아가며 자금을 지원하는지도 시장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의 책임은 기업에게도 있다.

엔터티 회계장부를 작성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경제의 불투명성을 조장한 장본인들이다. 또 이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게는 미국경제의 급속한 위축과 유가급등, 반도채 가격 급락 등의 대외여건 악화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경제가 조기회복하느냐 아니면 침체를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가 크냐 불신이 크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 변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불신을 기대 요인으로 바꿀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에 나서야 한다. 이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